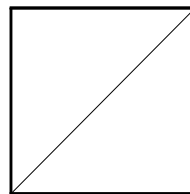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8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1. 31. (제 2 차)

의
결
사
항

(인천)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1. 31.

1. 의결주문

(인천)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천)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검사기간 : 2022.11.28.~2023.1.6.)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업법」상 금품수수 및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과 관련하여 前 ▼▼ ○○○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으로 통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3년도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8.24.) 심의필
- 2024년도 제2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4.1.23.) 심의필

<별지>

(인천)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2. 조치사유

가. 금품수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인천)모아저축은행 ●●●●●●●● 소속 前 ▼▼ ○○○은

20xx.x.xx.~20xx.x.xx.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주)xxxxx 대표이사 ◇◇◇ 및 (주)xxxxxxxx·(주)xxxxxx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xxx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주)xxxxxxxx의 100% 대주주이며, (주)xxxxxxxx 소속 모집인(xxx)을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xxxxxx를 설립하고, (주)xxxxxx 관련 작업대출의 자금공급책 역할을 지속하는 등 (주)xxxxxxxx의 실질사주로 보임

※ 저축은행검사국(현 중소기업검사1국)은 20xx.x.x. ○○○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0xx.x.xx. xx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x년 x개월 및 벌금 x억 x천만원을 선고받음

<관련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동법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모아저축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중 차주 ■■■■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xxx건, xx,xxx백만원¹⁾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²⁾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xxx,xxx백만원의 xx.x%에 해당

2) 평균 xxx백만원(평균 대출액 xxx백만원의 xx% 수준)에 달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의 조달 경위·방법, 본인자금이 있는 차주가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x.x%(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평균이자율)의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만기도 단기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관련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붙임 1)

관계 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생략)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중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 제1항 관련)

3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0. 제37조의5를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⑤ ~ ⑦ (생략)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 ~ ④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중소금융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7376